

의대 증원, 지방 80% 가닥... '졸업하면 수도권行' 막을 대책은?

정부, 지방 거점 국립대·비수도권 '미니의대' 위주로 증원 방침
총장들 "의대생 교육시켜도 수도권 병원이 졸업생 흡수" 우려
전공의 정원,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더 많이 배정... "개선 필요"
수도권서 실습·운영하는 '무늬만 지방 의대' 개선책도 나와야

정부가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80%(1600명)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 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00명 증원분을 지역별·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했다.

정부는 늘어난 2000명 정원을 수도권에 400명(20%), 비수도권에 1600명(80%)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3058명) 중 수도권은 1035명(33.8%), 비수도권은 2023명(66.2%)으로 구성돼있다. 정부 방침대로 정원 배정이 이뤄지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29.4%),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71.6%)이 된다.

그 중에서도 지방 거점국립대와 정원 40명 이하 비수도권 '미니 의대'를 위주로 증원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방 거점국립대는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등 9곳이다.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늘면 이들 대학이 갖는 정원 규모가 서울 주요 대학보다 더 커지게 된다. 지방 국립대들은 정부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늘어난 의대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지방의 한 거점국립대 A총장은 "대학과 지자체가 인프라와 자원을 대거 투자해 의대생들을 교육시켜도 수도권 대형병원이 학생들을 다 빨아들인다"고 말했다.

A총장은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이 알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반대로 지역은 의대생을 늘려도 전공의 부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정원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배정되도록 왜곡돼있다"며 "증원과 함께 전공의 TO(정원)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전공의 기본정원(3184명)은 수도권 55%(1661명), 비수도권 45%(1523명) 비율로 책정돼 있다.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늘린다면 하더라도, 전공의 정원이 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라 졸업 후 수련과정은 수도권 병원에서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북대와 원광대의 경우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이곳 의대생 49명을 넘겨

받았지만, 전공의 정원은 전북대는 5년 간 7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원광대는 변동이 없었다.

증원 추진과 함께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부속병원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 해소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대학 총장들은 입을 모은다.

영남 지역 한 국립대 B총장은 "서울 등 수도권도 필수로 분야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전공의 비중을 수도권보다 지역부터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은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무늬만 지방 의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예를 들어 울산대(40명)는 실습 교육을 위해 부속·협력병원을 총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1곳은 수도권(서울아산병원)에 위치해있다.

울산대 외에 부속·협력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지방 의대는 가톨릭관동대(강원·49명), 건국대 충주(충북·40명), 을지대(대전·40명), 동국대 WISE(경주·49명) 등이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비수도권 '미니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자칫 수도권 대형병원만 수혜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의대 증원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의 수도권 병원 교육·실습 운영 관행을 개선해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병원에서 수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 40개 의대에 정원 신청 공문을 보내면서 이들 의대에 대해 연도별 교육·실습 개선 계획도 함께 적어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와 반발은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직을 결의한 20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국립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이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을 심사하는 배정심사위원회의 관련 사항 일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배정심사위원회 구성, 일정,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오늘부터 유생’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에서 열린 신방례에서 성균관대 신입생들이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에게 인사 올리는 의식인 '알모'를 하고 있다. 신방례는 조선 시대에 과거에 합격한 유생들을 위한 환영식이자 선배들이 신입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통과 의례다.

성균관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사태 악화면 떠날 수밖에”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 호소문

'빅5' 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사태가 악화돼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현장을 떠나 국인을 위해 대의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원인과 책임은 바로 현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실망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실을 떠났다"면서 "수술실도, 병실도 점점 비어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필수·지역의료 현장을 살려 달라는 의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구체적·현실적 방안 없는 이틀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뜬금없이 발표했고, 2000명이라는 중원 숫자는 절대불변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지역의사가 부족하다"면서 "무리한 의대정

원 증원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당장 필수·지역의료에 투자하면 수년 후가 아닌 지금 바로 필수·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가"면서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필수로 전문의가 돼 미래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데 대학병원들이 몇 개월 후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최근 한 달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환자 곁에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가중되는 진료 부담으로 이젠 체력적인 한계에 다다랐고 탈진돼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공직자들이라면 강압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이성을 찾자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기초의학교실 등 500명 가량의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임박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사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16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참여키로 했다. 의대 4곳은 내주 설문조사를 거쳐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점을 25일로 결정한 것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25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 의료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의들의 부재로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달 가까이 의료현장을 지켜오면서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슬비기자

장흥서 주택 불, 20대 장애인 안타까운 죽음

전기 합선으로 발화 추정

장흥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20대 장애인이 숨졌다.

16일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8분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79㎡를 모두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주택 안방에서는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를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아버지 B(48)씨는 "아들을 깨워 걸음을 일린 뒤 먼저 집 밖으로 나왔는데, 뒤따라오던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어머니는 야간 근무로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방 냉장고 뒤편 전선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흥=김도영기자

부산저축은행 관련 尹명예훼손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바꾸기 의혹'을 제기한 기자 및 더불어민주당 대상 검찰 수사가 오는 18일 200일을 맞는다. 장기간 수사가 결과물 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국면 당시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민주당 TF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소환되면서 검찰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17일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해 9월 1일 신학철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한 뒤로 200여일 동안 '윤 대통령 허위 의혹 보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사 및 기자 대상 수사에 주력하던 검찰은 최근 민주당 화천대유 토크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 TF)에 참여한 법조인들을 불러, 대선 국면에 이뤄진 윤 대통령 고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TF 회의에 참석한 차모, 최모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이날 초부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께 화천대유 TF 등 민주당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화천대유 TF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민주당의 당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님에도 대선을 앞두고 관련 고발장이 작성된 절차와, 변호인들이 해당 고발에 가담한 배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아닌 풍

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발하면 문제 아니냐는 식으로 변호인들에게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고 한다.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검찰이 민주당 고발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등 파즐 맞추기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이를 두고 수사 대상자들은 '최재경 녹취록'에 한정해 민주당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찰이 전선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기도 한다. '최재경 녹취록'이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것을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총선 국면에서 '윗선'을 목표로 한 수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불만도 뒤따른다.

이 사건 피의자로 임건민 민주당 관계자는 "녹취록 관련 조사는 지난해에 모두 끝났는데도, 검찰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대선 당시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과 이재명 대표 등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